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**보건복지부 2020년 3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**

## I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

– 3월 1일부터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확대,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 –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3월 1일(일)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
**▸ 복지용구란?**

□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·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

* 미끄럼방지용품,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·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 등재

□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 내에서 이용 가능

■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.

-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여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하였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.

○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된다.

- 배회감지기는 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하였으나,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○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.

-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.

- 다만,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,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*하게 된다.

* 기존과 동일하게 3월 중 제품 등재 신청을 접수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, 올해 하반기 중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■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“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,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6195,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,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부, 2020.3.2.

## Ⅱ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 국무회의 의결

–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조사의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추가 –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3월 1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·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추가(안 제3조제1항)한 것이다.

○ 이에 따라,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.

○ 보건복지부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”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243,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, 2020.3.10.

## Ⅲ “잘 놀아야 잘 자란다”, 놀이 중심 표준보육과정 개정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아동 중심,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* 개정안(보건복지부 고시)을 3월 12일(목)부터 3월 31일(화)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.

* 국가 수준에서 0~5세 영아를 위한 표준적 보육과정 제시

■ 이번 표준보육과정(0~5세) 개정안은 이미 개정된 「3~5세 누리과정」*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.

* ’19.7.24. 개정, ’20.3.1. 시행

**〈 참고 〉 개정 누리과정 주요 내용**

□ (아동 중심) 교사 주도적 교육에서 벗어나, 아동 주도적·자발적 놀이 권장
□ (놀이 중심) 일과에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, 놀이를 통한 배움 강조
□ (현장 자율성) 계획 수립, 교수 방법 및 평가 등에서 교사 자율성 확대
□ (교육 내용 적정화) 연령별 구분 폐지 등을 통해 3~5세가 경험하여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적정화(연령별 369개 세부 내용 → 연령 통합 59개 내용)

○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영유아 중심,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통해 자율성·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또한 보육 현장에서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(0~5세)과 누리과정(3~5세)과의 연계를 통해 0~5세 영유아의 경험, 연령 간 발달 연결이 가능하고,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일관된 보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.

■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의 구성 및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❖ **성격**

□ ① 국가적 공통성, 개별적 다양성 추구, ② 영유아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, ③ 영유아 중심, 놀이 중심, ④ 영유아 자율성·창의성 신장 추구 등 목적 제시

❖ **제1장 총론**

① (구성 방향) 추구하는 인간상, 구성 영역 등 제시

-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"건강한", "자주적인", "창의적인", "감성적인", "더불어 사는" 사람을 제시
- 구성 영역으로 △기본생활, △신체운동, △의사소통, △사회관계, △예술경험, △자연탐구 제시

② (운영)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·운영하고,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하도록 지원

③ (평가)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한다는 원칙 제시

❖ **제2장 각론**

□ (0~1세, 2세) 3~5세 누리과정에 비해 기본생활 강조

- 특정한 활동 여부보다는, 경험하기, 시도하기에 중점
- 0~1세에 비해 2세는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, 경험시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

□ (3~5세) 개정 누리과정과 동일

- 신체운동·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 각 영역별로 아동의 자발적 놀이, 참여 강조

■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모아 개정 고시한 후, 9월 새 학기부터 일선 어린이집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고시 후 어린이집 실제 적용에 이르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,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급, 관계자 교육·연수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.

■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"이번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은 교사 주도적 보육에서 벗어나 영유아 중심, 놀이 중심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."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 “표준보육과정 개정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, 개정안이 현장 적용에 성공하도록 어린이집 교사,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6256,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, 육아정책연구소, 2020.3.12.

## Ⅳ 저소득층 230만 명, 아동 263만 명,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,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(쿠폰)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, 아동(만 7세 미만) 263만 명,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.

○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,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.

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*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~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*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인연금, 차상위 장애(아동)수당, 차상위 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

○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,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,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.

**〈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·가구규모별 지원액〉**

(4개월 총액 기준, 원)

| 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계·의료 | 520,000 | 880,000 | 1,140,000 | 1,400,000 | 1,660,000 | 1,920,000 |
| 시설 | 1인 520,000 | | | | | |
| 주거·교육·차상위 | 400,000 | 680,000 | 880,000 | 1,080,000 | 1,280,000 | 1,480,000 |

■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(만 7세 미만)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.

○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,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.

■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,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.

○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, 온누리상품권, 지역전자화폐(모바일·카드*), 전자바우처(카드포인트** 부여 방식, 아동 한정)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.

* 인천e음카드 등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카드

** 아동 가구 보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

■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하여 안내할 계획이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.

○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"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,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■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(30%)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, 소정(급여의 약 20% 추가)의 장려금(인센티브)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.

* 예시: 노인일자리 급여 27만 원 중 8.1만 원(30%)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.9만 원(약20%)을 추가로 수령 가능

○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.

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“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·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전했다.

○ 더불어 “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6312,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·아동복지정책과·노인지원과, 2020.3.25.

## V 국립보건연구원,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

–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-관 협력 항체치료제와 백신 개발, 환자 임상, 진단제 연구 등 추진 –

■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 국립보건연구원(원장 권준욱)은 3월 26일(목)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.

○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‘코로나19의 치료·임상 및 백신개발 연구 기술 기반 마련’에 대한 연구계획 발표(2월5일) 및 산·학·연 전문가 회의(2월19일)를 통해,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를 발굴하였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.

■ 긴급 과제공모 결과,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제는 자체 연구 및 국내외 임상시험, 허가 등의 경험이 있고 대량생산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선정되었다.

○ 이 중 단클론항체 치료제* 개발은 ㈜셀트리온과 협력하고, 합성항원(서브유닛)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백신** 개발은 SK바이오사이언스㈜와 추진한다.

* 단클론항체 치료제: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·평가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하여 치료제로 이용

** 합성항원(서브유닛) 백신: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(항원)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하여 제조한 백신으로 감염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높음

○ 이번 연구를 통해 후보물질 개발과 효능 평가 등이 수행되며,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비임상·임상시험도 지원할 예정*이다.

*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('20~29년) 구성하여 '20년 연구 예산(119.5억원) 활용 예정(6월~)

- 또한 실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·개발 단계부터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.

■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(경북대학교, 국립중앙의료원)과 협업하여 임상현장에 필요한 환자의 임상역학과 면역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고,

○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(광주과학기술과학원, 한국화학연구원)과 협업하여 방역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자원과 치료제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.

■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"국민 보건안전과 치료제·백신 주권 관점에서, 치료제와 백신이 국내에서 자체 개발·생산되고 기초연구 결과가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-관 협력을 통하여 실용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"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6320, 보건복지부 백신연구과(백신), 신종매개체감염병연구과(치료제, 진단, 임상), 육아정책연구소, 2020.3.26.

# Ⅵ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

– 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첫 실시 –
–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,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등 추진 –

■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(가족 포함)와 제공기관,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「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」결과를 발표하였다.
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6조의2*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,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.

*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○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,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,

-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'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'하기 위함이다.

■ 장기요양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□ 조사기간: '19. 9. 17 ~ '19. 9. 30
□ 조사대상: 장기요양 수급자 6,000명,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4,935명(미이용자 가족 제외), 장기요양기관 2,000개소, 장기요양요원 4,000명
□ 조사내용: 수급자 가구형태, 연령, 건강사항,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과 만족도,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, 장기요양요원 처우 현황 등
□ 조사기관: 통계청(조사), 한국보건사회연구원(분석)

■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## 1. 장기요양 수급자

| 장기요양 수급자 관련 주요 내용 |
|---|
| • (일반적 특성) 여성비율이 높고(72.8%), 80세 이상이 2/3(65.0%)<br>• (건강상태) 대부분 고혈압, 치매,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보유(평균 3.4개)<br>• (이용 실태)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22.5%<br>– 미이용 사유는 병원 입원 중, 가족 아닌 사람 기피, 가족돌봄으로 충분 등<br>• (서비스 이용자) 재가서비스 이용자 70.3%, 시설이용자 29.7%<br>• (재가 이용자) 34.0%가 독거가구이고, 독거가구의 절반은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함. 부부가구는 24.8%, 자녀 또는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39.3%<br>– 대부분(75.3%)은 재가서비스 중 한가지 유형의 서비스만 이용<br>• (시설 수급자) 평균 시설입소 기간은 2.8년<br>– 시설 만족도는 높으나(82.4%), 1인실이 3.3%에 불과하여 공동생활 만족도 낮음(68.7%) |

### (1) 장기요양 수급자 일반 현황

○ (인적 특성) 수급자 중 남성 27.2%, 여성 72.8%로 조사되었고,

- 평균연령은 81.8세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%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*.

  * 65세 미만 3.7%, 65~69세 4.7%, 70~79세 25%, 80~89세 50.1%, 90세 이상 16.6%

○ (건강 특성) 수급자는 평균 3.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,

-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.3%, 치매 57.2%, 당뇨병 29.3%,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.8%, 뇌졸중 25.8%로 나타났다

### (2)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실태

○ (이용 현황)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.5%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, 22.5%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,

-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.3%는 재가급여를, 29.7%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.

○ (이용 결정 주체)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.8%는 자녀가, 11.7%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.6%에 불과하여,

- 가족,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(3)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이용 실태

○ (가구 특성) 단독가구가 34.0%, 부부가구 24.8%, 자녀동거가구 31.9%,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.4%로 조사되었다.

- 노인 단독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 거리를 분석한 결과, 26.5%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, 25.6%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(14.8%는 같은 시·도에, 33.2%는 다른 시·도에 거주),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○ (급여 이용 현황) 재가 수급자 중 75.3%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*하고 있고,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(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방문간호 등)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.8%에 불과했다.

* 방문요양 55.7%, 주야간보호 15.5%, 방문목욕 3.6% 등

○ (만족도)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.2%, 방문목욕 85.1%, 방문간호 69.5%, 주야간보호 90.4%, 단기보호 44.6%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방문요양,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,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(4) 장기요양 시설수급자 이용 실태

○ (이용 현황)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.6%는 노인요양시설을, 9.4%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.

○ (이용 기간) 평균 입소기간은 2.8년으로, 1년 미만 22.1%, 1~2년 미만 26.6%, 2~3년 미만 17.0%, 3~5년 18.6%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.7%에 달했다.

○ (만족도) 전반적 만족도는 84.2%로 높게 나타났으나,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.7%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
* 식사서비스 만족도 78.9%, 목욕서비스 85.3%, 신체·인지·여가서비스 77%, 간호 및 의료서비스 83.5%, 물리적 환경 82.6%, 장기요양요원 88.8%

-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.3%에 불과하고 55.0%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(5) 장기요양 미이용자 실태

○ (미이용자 현황)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.5%로,

- 그 중 52.2%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(요양)병원 입원은 47.2%,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.2%였다.

○ (미이용 사유)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(30.1%),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(23.4%), 가족 돌봄으로 충분(12.2%), 요양병원 선호(10.0%)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.

- 이 중, 38.5%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, 27.0%는 시설 이용 의향, 34.4%는 이용 의향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.

## 2.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

| 장기요양 이용자 가족 관련 주요 내용 |
|---|
| • (장가요양 정보) 대부분 이웃이나 지인, 가족,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음(62.9%)<br>• (서비스 만족도)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4%로 높음<br>– 불만족 이유는 재가는 '이용시간 불충분(47.4%)', 시설은 '비용부담(54.5%)'이 가장 높음<br>• (추가 서비스 수요) 재가 이용자는 가족은 식사·영양상담(29.7%), 이동지원(27.7%)<br>–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·위생·청결 개선(22.5%), 돌봄인력 확대(19.9%) |

(1) 일반 현황

○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족의 수급자와의 관계는 딸 30.7%, 아들 30.1%, 배우자 20.3%, 며느리 12.9% 순이었다.

(2) 장기요양보험 이용 관련

○ (정보 습득 경로)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는 이웃이나 지인이 27.1%, TV·신문·인터넷이 18.6%, 직계가족 17.2%, 장기요양기관 직원 15.0%,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6.6%로 응답하였다.

○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인력수준이 1위로 28.5%, 소개가 19.1%, 접근성이 13.4%로 나타나,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

로 나타났다.

(3)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

○ (만족도)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.1%, 보통 12.2%, 불만족은 3.7%였다.

-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'불충분한 이용시간'이 47.4%로 가장 많았고,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 18.7%, 장기요양요원 12.4%로,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.

- 시설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비용부담이 54.4%로 가장 많았고,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.4%, 식사서비스 불만이 7.1%,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.9%로 집계되었다.

○ (필요한 지원)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 관련,

-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·영양상담 29.7%, 차량지원 27.7%, 방문간호 17.8%, 단기보호 11.3%가 중요하다고 답했고,

-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, 위생, 청결 개선이 22.5%, 돌봄 인력 확대가 19.9%였으며, 그 외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*이 48.9%에 달해 시설 내 의료·재활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
  * 질환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제공 16.2%, 의료인력 강화 11.0%, 병원 이송 서비스 11.9%, 기능회복 훈련 강화 9.8%

○ (가정 돌봄 계획) 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 건강 호전 시에도 25.4%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,

- 그 이유는 '가족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'이 절반 이상(54.5%), 자택 주거환경이 좋지 않음이 28.7%로 조사되었다.

### 3. 장기요양기관

| 장기요양기관 관련 주요 내용 |
|---|
| • (운영형태) 개인 운영 시설(75.7%), 이용자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(60.7%)이 많음<br>• (운영 상 애로점)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(72.3%)<br>–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기관 수 급증에 의한 기관 간의 과잉경쟁(48.4%)으로 나타남 |

(1) 장기요양기관 일반 현황

○ (제공서비스 유형)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75.6%, 입소 기관은 24.4%였다.

* (재가) 방문요양 45.3%, 주야간보호 14.7%, 방문목욕 13.6%, 방문간호 1.6%

* (시설) 노인요양시설 15.9%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.5%

○ (운영 주체)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 75.7%, 비영리법인 21.8%, 영리법인 2.5%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았다.

○ (규모)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.7%로 가장 많았고, 30~49명은 20.6%, 50명 이상인 기관은 18.7%로 가장 적어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있었다.

(2) 시설 내 안전사고

○ (발생률)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.6%로, 대부분 낙상사고이며, 연평균 2.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(3) 기관 운영의 어려움

○ (어려운 점)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.3%로 가장 많았고, 재정 운영이 71.2%, 장기요양기관 평가 67.5%, 인력채용 및 관리 62.5%, 정책 변화 대응 62.4%로 나타났다.

-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48.4%,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.8% 등으로 나타나, 장기요양기관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## 4. 장기요양요원

| 장기요양요원 관련 주요 내용 |
|---|
| • (직종) 요양보호사가 91.0%로 가장 많음<br>• (인적 특성) 여성이 94.7%로 월등히 많고, 50~60대가 대다수임(79.8%)<br>• (재가기관 고용형태) 74.7%가 계약직으로 나타나는데, 이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는 방문형 서비스가 많은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<br>– 시설은 정규직 비율이 72.3%로 상대적으로 높음<br>• (안전) 스급자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언어적 폭력 25.2%, 신체적 폭력, 위협 16.0%, 성희롱이나 신체 접촉이 9.1%로 나타남<br>• (직업 만족도)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54.0%로, 유형별로는 일에 대한 보람이 가장 높음(75.8%)<br>• (처우개선 필요 사항) 임금수준(45.4%) 개선 요구가 가장 높음 |

### (1) 일반 현황

○ (직종) 91.1%가 요양보호사였고 그 외 직종은 간호(조무)사 4.3%, 사회복지사 4% 물리(작업)치료사 0.7%로 집계되었다.

○ (성별) 응답자 중 여성 94.7%, 남성은 5.3%에 불과해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.

○ (연령) 종사자 중 6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0.4%를 차지했고, 50대는 39.4%, 40대가 8.6%, 70세 이상이 8.4%이었다.

- 이에 반해 30대는 2.1%, 20대는 1.0%에 불과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### (2) 근무 조건

○ (고용 형태)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은 38.1% 계약직은 61.9%로 나타났다.

- 재가기관은 계약직 비율이 74.7%로 높았으나 시설은 정규직 비율이 72.3%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.

- 이는, '재가서비스'가 주로 '방문서비스'여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○ (월 근무시간) 서비스 제공 유형별 월 평균 근로시간은

- (시설)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6.1시간, 노인요양시설은 172.0시간으로 나타나, 시설 종사자가 재가서비스 종사자('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')보다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은

것으로 나타났다.

- (재가) 방문요양이 76.0시간, 방문목욕은 57.7시간, 방문간호 90.4시간, 주야간보호 166.1시간, 단기보호 181.2시간으로 나타났다.
  • 방문서비스는 제공 종사자는 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,
  • 이는 '가사와 업무 병행(34.7%)', '일거리 없음(12.2%), '건강이 좋지 않음(7.7%)', '본인이 원해서(7.3%)' 등의 사유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종사자가 44.4%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○ (처우)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'언어적 폭력'을 당한 비율은 25.2%, '신체적 폭력이나 위협'을 경험한 사람은 16.0%, '성희롱, 성폭력'은 9.1%로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*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확충('20년 4개소, 서울·경기·인천·울산), 향후 지속 확충 예정

* 건보공단에서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이용 설명회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, 요구해서 안 되는 사항 등 권익 관련 사항 안내

(3) 직업 만족도와 개선 의견

○ (만족도)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.4%로,

- 일에 대한 보람(75.8%),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(62.4%)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,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(22.9%), 임금 수준(35.0%)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.

○ (자긍심)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75.1%,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.4%였고,

-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32.5%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, 낮은 임금이 23.7%, 업무강도 12.3% 등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(처우 개선) 장기요양요원은 '임금수준'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(45.4%),

- 법정수당과 휴게·근로시간 보장이 18.3%, 수급자 가족 교육이 9.5%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6.5%, 고충상담·건강지원 등 서비스 확대가 6.2%로 뒤를 이었다.

■ 보건복지부는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,

○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.

■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"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,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"고 전했다.

○ 아울러 "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·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"고 밝혔다.

■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, 통계청 국가통계포털(KOSIS)*를 통해 세부 결과가 5월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.

* kosis.kr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6337,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, 2020.3.31.